도내 인구감소지역 9곳, 주요 8대 지표 현황과 과제

※ 지난 10월 18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하고 자연적·사회적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사회 활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조성, 패키지 재원 지원 추진을 알림

※ 이를 위해 주요 8대 지표를 선정, 지수화하였으나 지자체간 서열화를 의식하여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 충남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9곳(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이 지정되었으며, 본 분석은 정부에서 제시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활용된 8대 지표에 관하여 우리 지역에 속한 9곳 시군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지역 주도의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지역 맞춤형 핀셋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별 세밀한 분석과 컨설팅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함

* 본 분석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과 도내 인구감소지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역 내 인구감소지역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였으며, 동태적인 움직임은 5년 전 동일 지표를 비교하였음.
* 분석에 사용된 8대 지표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산식과 분석 시기에 차이로 수치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다만, 지표의 추세는 동일 할 것으로 판단됨

[목 차]

1 경과 및 정부정책 방향

2 주요 8대 지표 현황 분석

3 정책적 방향(안)

< 요 약>

1. 경과 및 정부정책 방향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공포(시행일 2021.6.9.)

⇒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해 주요 8대 지표를 선정, 인구감소지수를 개발

⇒ 행안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충남은 9곳 시·군 포함

*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

* 8대 지표(부록 참조) : ①연평균인구증감률 ②인구밀도 ③청년순이동률 ④주간인구 ⑤고령화비율 ⑥유소년비율 ⑦조출생률 ⑧재정자립도

○ 지역의 인력활력 제고를 위한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정책 지원 강화

⇒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52개, 총 2조 5600억원) 등 패키지 재원 투입, 초광역협력추진기반 구축 등

2. 주요 8대 지표 현황 분석

○ 예산 위축 속도 둔화, 금산·부여 심각, 서천·청양 위축 가속화

⇒ 예산과 공주·보령·논산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89곳 평균보다 속도가 느린 곳)이나 5년 전과 비교하면 대체로 악화

⇒ 특히, 금산과 부여, 청양은 양호한 지표는 1개로 가장 위축이 심각

⇒ 서천도 적극적인 저출산 정책으로 조출생률과 유소년 비율의 위축 속도를 둔화시켰으나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

○ 지표의 성격으로 보면, 공주·보령·태안·예산 등은 현재 지역경제활력은 다소 양호하나 미래의 성장을 담보하는 청년층의 유출이 심각

3. 정책적 방향

○ 정부정책과 부합하는 방향에서 도내 현황을 고려한 접근이 중요

○ 충남도는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인구유인 및 정착, 경제 활성화, 연계협력 강화의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

⇒ 서해안 관광개발 계획 등 기존의 관광개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6차 산업화를 강화하고 충남 공동 브랜드를 구축하는 방안,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간을 재창출하여 연속적인 행사 및 축제를 기획하는 방안

1 경과 및 정부정책 방향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공포(시행일 2021.6.9.)

○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의 과밀화(전체 인구의 약 50% 이상), 결혼적령기 인구의 비수도권 이탈 등 자연적·사회적 인구 감소로 농어산촌 지역의 소멸 전망

* 주민등록인구 기준(2021.11월기준) 50.4%(서울,인천,경기도), 충남 4.1%

○ 정부는 2020년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공포일 2020.12.8.) , 금년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공포

⇒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2) 정부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 충남 9곳 포함

○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해 주요 8대 지표를 선정, 인구감소지수를 개발

- 지방소멸지수는 하나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구체적인 인구감소에 대한 현상을 반영하기에는 한계

* 기존 지방소멸지수는 한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0.5 이하일 때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정의

- 이에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복합된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지표를 선정하고 지수개발을 실행

⇒ 행안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충남은 9곳 기초지자체가 포함

○ 다만, 지수와 구성지표인 8대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지자체간의 서열화 등을 이유로 미공개

* 8대 지표(부록 참조) : ①연평균인구증감률 ②인구밀도 ③청년순이동률 ④주간인구 ⑤고령화비율 ⑥유소년비율 ⑦조출생률 ⑧재정자립도

3) 인구감소지역 지원책 마련으로 지역의 인구활력 제고

○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 맞춤형 정책 시행

- (시·군·구)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
- (시·군) 시·군·구간 연계·협력을 위한 광역단위 사업
- (중앙부처)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 사업 발굴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22년 신규사업)

○ 지방소멸대응기금, 국고보조금 등 패키지 재원 투입

-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 10년간 지원) :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활력 증진사업

* (배분) 광역 25%, 기초 75%, 인구감소지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

-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 5600억원) : 인구감소 사업에 가점부여, 우선할당 등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청년마을 조성, 귀농·귀어컨설팅, 도시재생, 접경섬지역 LPG 인프라, 문화취약지역 활력제고 프로그램 등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 제정 계획

-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 개념 등 지원 근거 마련

* 7개의 법안 발의 중(11월말 기준)

- 지역간, 지역과 중앙간 연계·협력 활성화(지자체간 특별지자체 설치, 복수지자체간 생활권 협력사업 지원)

○ '지역소멸 선제대응방안' 마련

- 초광역협력추진기반 구축(부울경,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 인재·자본·일자리 유입 성장거점 육성
-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플랫폼 조성, 도시재생, 농어촌 맞춤형 생활거점 조성

2 주요 8대 선정지표 현황 분석

□ 인구감소지역 9곳, 8대 지표별 현황 종합

○ 도내 인구감소지역 중 **예산은 위축 속도 둔화**된 반면, **금산·부여 심각, 서천·청양 위축 가속화**

- 예산과 공주·보령·논산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89곳 평균보다 속도가 느린 곳)이나 5년 전과 비교하면 대체로 악화
- 특히, 금산과 부여, 청양은 8개 지표 중 89곳 평균보다 양호한 지표는 1개로 가장 위축이 심각한 모습
- 서천도 적극적인 저출산 정책으로 조출생률과 유소년 비율의 위축 속도를 둔화시켰으나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기에는 빈약한 실정

○ **공주·보령·태안·예산** 등은 현재 지역경제활력은 다소 양호하나 미래의 성장을 담보하는 **청년층의 유출이 심각**

인구감소지역, 주요 8대 지표 현황

구분	인구 규모	인구 밀도	주간 인구	조출 생률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청년층 이동률	양호[1] 지표	재정[2] 자립도
공주	○	○	○	○				4개	12.7
금산						○		1개	11.7
논산					○	○	○	3개	11.6
보령	○		○				○	3개	11.9
부여						○		1개	8.5
서천				○		○		2개	9.7
예산	○	○	○	○		○	○	6개	11.7
청양					○			1개	9.4
태안	○	○	○					3개	12.5

1) 재정자립도를 제외한 7대 지표를 기준,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의 평균과 비교하여 평균보다 위축 또는 둔화 정도가 양호한 지표를 표시한 것으로 전반적인 인구 및 지역 활력 감소는 진행 중
2) 재정자립도는 세입과목 개편후를 나타내고 21년 수치가 기준임

1) 인구감소와 밀집도 하락

□ 상대적으로 **서해안권보다 남부권에서 빠른 인구 감소**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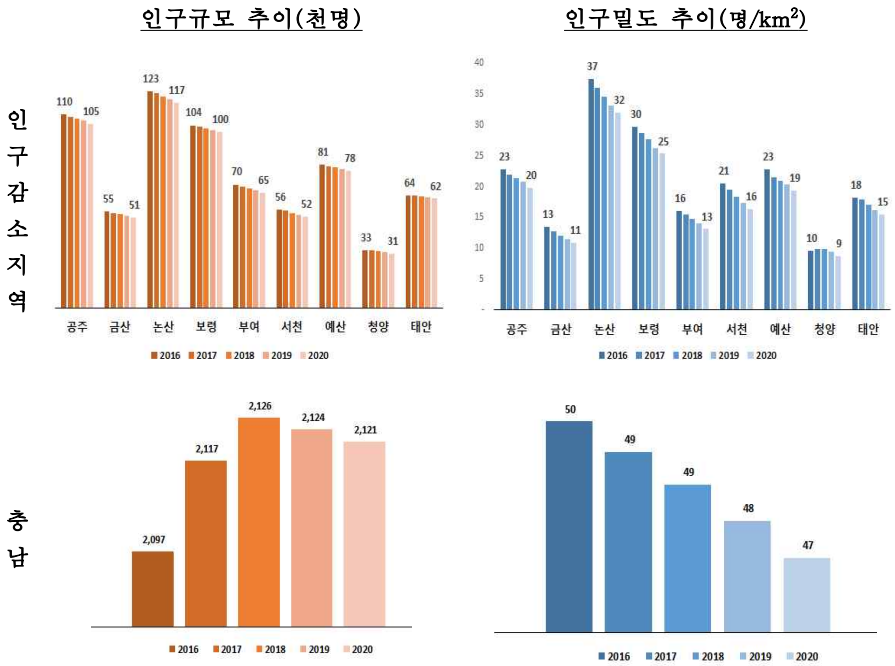
○ 충남의 전체 인구는 '20년 전년대비 0.1% 감소, 최근 5년간 연평균 0.3% 소폭 증가

○ 이에 반해 도내 인구감소지역 9곳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31% 감소하였고 이는 전국 89곳 평균(-1.34%)과도 유사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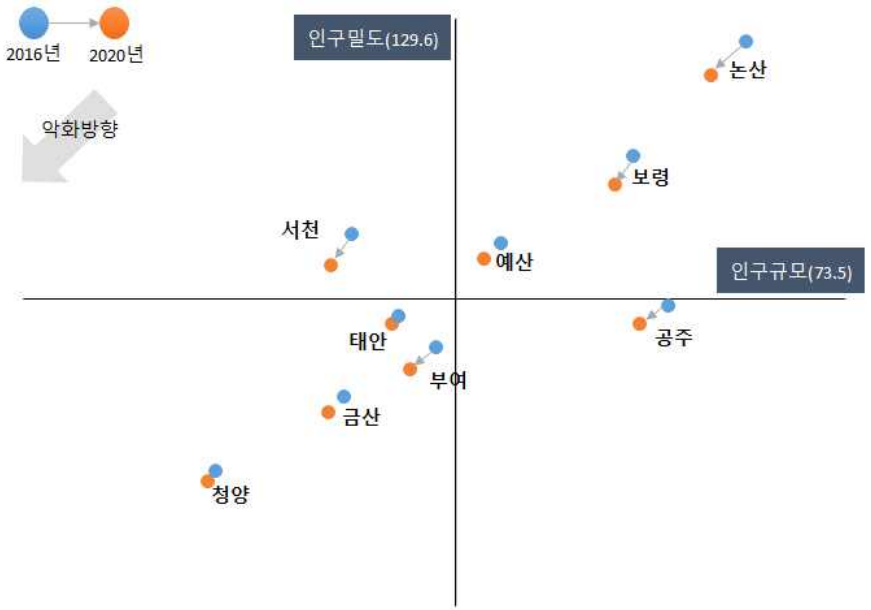
- 서천·부여·금산·청양·논산은 평균보다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
- 인구밀도에서도 서천·금산·부여 등 남부권에서 유사한 흐름

○ 최근으로 올수록 지역의 전반적 활력은 더 떨어지는 상황

- 세종시로 인구 유출이 나타난 청양과 공주, 주요 남부권인 부여와 논산 등에서 인구 감소폭 확대
- 도내 인구감소지역 모두 급격한 인구감소에 직면한 상태



최근 시군별 인구 변화 및 분포(천명, 명/km²)



주 : ()안 수치는 인구감소지역 9곳의 각 지표별 최근 연도 평균임.

구분	인구규모(명,%)					인구밀도(명/km²,%)				
	2016	2019	2020	19vs20 전년비	연평균 증감률	2016	2019	2020	19vs20 전년비	연평균 증감률
공주	109,931	106,474	104,545	-1.8	-1.25	127	123	121	-1.8	-1.25
금산	54,612	52,257	51,413	-1.6	-1.50	95	91	89	-1.6	-1.50
논산	123,213	118,842	116,675	-1.8	-1.35	222	214	210	-1.8	-1.39
보령	103,873	101,114	100,229	-0.9	-0.89	181	172	171	-0.9	-1.44
부여	70,187	66,740	65,354	-2.1	-1.77	112	107	105	-2.1	-1.77
서천	56,012	52,805	51,866	-1.8	-1.90	153	144	142	-1.8	-1.94
예산	81,339	79,238	78,084	-1.5	-1.02	150	146	144	-1.5	-1.02
청양	32,753	31,717	30,948	-2.4	-1.41	68	66	65	-2.4	-1.40
태안	63,900	62,743	62,214	-0.8	-0.67	124	122	121	-0.9	-0.68
충남	2,096,727	2,123,709	2,121,029	-0.1	0.29	255	258	257	-0.1	0.23
전국89곳 평균				-1.6	-1.34	전국89곳 평균			-1.62	-1.36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현황
주1 : 연평균증감률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수치, 1)은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연평균인구증감률 평균을 의미함
주2 : 인구밀도 = 주민등록인구/면적이며, 연평균증감률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수치

2) 재정과 경제활동 둔화

□ 10% 내외의 재정자립도, **금산·부여 주간인구 유출 심각**

○ 변화폭은 크지 않지만 부여·서천·청양은 10%를 밑도는 재정자립도를 기록

- 최근 논산과 공주의 재정자립도는 소폭 향상

  * 부여의 재정자립도는 89곳 중 55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

- 코로나19 이후 태안 등 관광산업이 집정된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폭이 확대

○ 상업·업무시설이 부족한 금산·부여 등은 주간인구 감소폭도 전 89곳 평균을 웃도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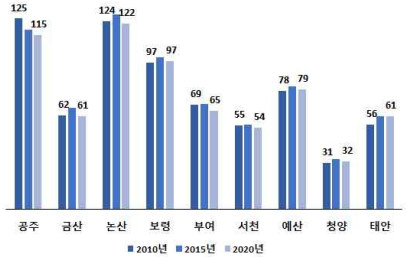
- 주간인구 증가세를 보인 태안, 소폭의 감소를 보인 보령 등 관광업 종사자가 분포하는 지역과 신규 대규모 주거지가 형성된 세종과 인접한 공주, 청양 지역 주간인구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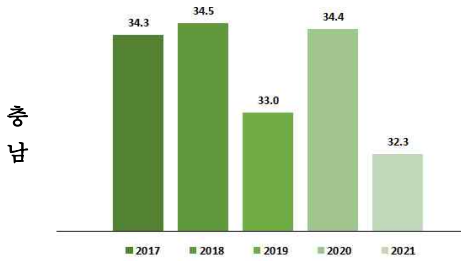
  * 교통여건 향상과 인근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생업과 주거지가 분리(청양, 공주 → 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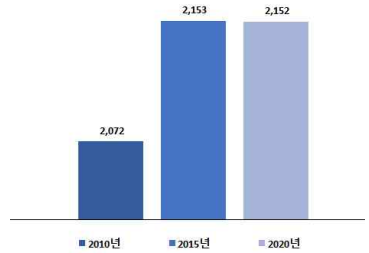
- 예산도 홍성 등으로 주거지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나 충남도청 이전 등 출퇴근 인구 유입도 하나의 요인, 소폭의 감소 시현

재정자립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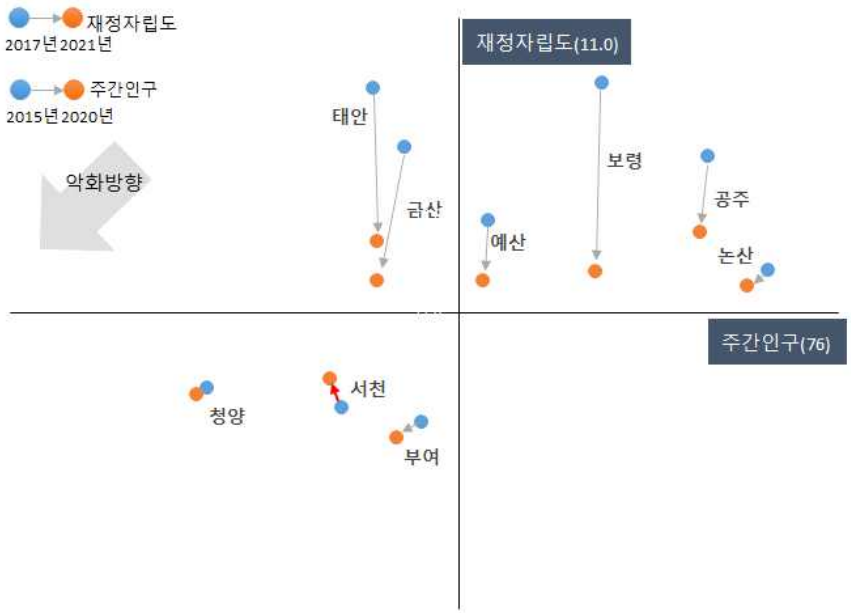
주간인구 추이(천명)







최근 시군별 재정자립과 주간인구 변화 및 분포(천명, %)



주 : ()안 수치는 인구감소지역 9곳의 각 지표별 최근 연도 평균임.

구분	재정자립도(%, %p)					주간인구(명, %)			
	2017	2020	2021	20vs21 전년차	연평균 증감	2016	2019	2020	연평균 증감률
공주	14.2	12.5	12.7	0.2	-0.38	125,338	117,951	114,589	-0.72
금산	14.4	12.6	11.7	-0.9	-0.68	61,803	66,711	61,408	-2.05
논산	11.9	11.4	11.6	0.2	-0.08	123,638	128,015	122,298	-1.14
보령	15.7	13.6	11.9	-1.7	-0.95	96,675	100,088	97,261	-0.71
부여	8.8	9.1	8.5	-0.6	-0.08	68,620	69,501	64,700	-1.77
서천	9.1	10.1	9.7	-0.4	0.15	55,334	55,948	53,629	-1.05
예산	12.9	12.7	11.7	-1.0	-0.30	77,885	80,727	78,811	-0.60
청양	9.5	10.2	9.4	-0.8	-0.02	30,717	33,131	31,603	-1.17
태안	15.6	13.0	12.5	-0.5	-0.78	55,621	61,336	61,458	0.05
충남	34.3	34.4	32.3	-2.1	-0.50	2,072,303	2,152,660	2,152,168	0.01
전국 89곳 평균	10.5	10.4	10.2	-0.5	-0.08	전국 89곳 평균			-0.84

자료 : 행정안전부, 재정자립도,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간인구

3)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심화

□ 부여는 충남 평균보다 10명이나 적게 낳고, 고령화 인구는 15명이 많은 가장 큰 편차를 기록

○ 조출생률은 최근 5년간 충남 전체를 비롯하여 부여·태안·청양·보령 등 급감

- 시군별 특징을 보면, 서천은 그 감소폭이 둔화, 2020년에는 전년대비 6.3% 증가하였고, 태안도 5.8% 증가

  * 서천군 한산면 사례, 한산마을교육공동체 느티나무, 한산초등학교 수요만족형 돌봄센터

- 최근 5년 동안 감소폭이 크지 않았던 공주·예산 등은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

  * 예산(→홍성)은 도내 이동, 공주는 세종으로 인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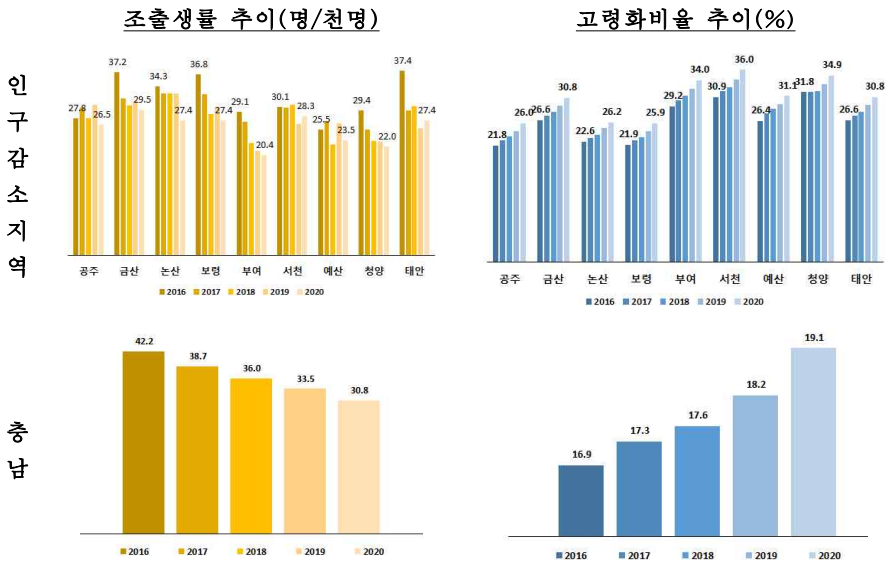
○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고령화 비율은 30.6%(전국 89곳 평균 30.7%), 가장 심각한 고령화 지역은 서천으로 조출생률 현상과 상반된 모습

- 서천은 2016년 50세 이상 인구가 충남 평균보다 많이 유입(1.7%, 60-64세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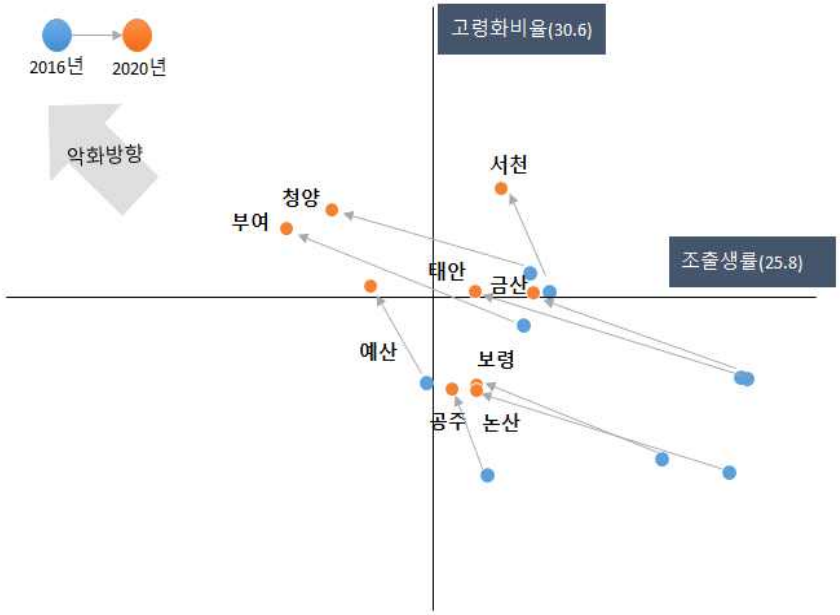
- 특히, 60세 이상 인구의 유입이 크게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65세 이상 인구로 자리 잡으며 고령화 비율도 증가

  * 60-64세 인구 순이동률(%) 충남(1.1), 천안(0.5), 금산(1.9), 부여(1.5), 서천(1.6), 청양(2.1), 태안(2.2)

- 대체로 젊은층 인구는 유출, 노년층 인구가 유입되며 현상이 심화



최근 시군별 조출생률과 고령화비율의 변화 및 분포(%)



주 : ()안 수치는 인구감소지역 9곳의 각 지표별 최근 연도 평균임.

구분	조출생률(명/천명, %)					고령화비율(%, %p)				
	2016	2019	2020	19vs20 전년비	연평균 증감률	2016	2019	2020	19vs20 전년차	연평균 증감
공주	27.8	30.5	26.5	-13.2	-1.2	21.8	24.6	26.0	1.4	1.06
금산	37.2	31.2	29.5	-5.4	-5.6	26.6	29.3	30.8	1.4	1.04
논산	34.3	32.9	27.4	-16.7	-5.4	22.6	25.0	26.2	1.1	0.90
보령	36.8	30.0	27.4	-8.7	-7.1	21.9	24.5	25.9	1.4	1.00
부여	29.1	21.2	20.4	-4.1	-8.6	29.2	32.4	34.0	1.6	1.20
서천	30.1	26.7	28.3	6.3	-1.5	30.9	34.2	36.0	1.8	1.37
예산	25.5	26.8	23.5	-12.6	-2.1	26.4	29.6	31.1	1.5	1.18
청양	29.4	23.1	22.0	-4.6	-7.0	31.8	33.3	34.9	1.5	0.77
태안	37.4	25.9	27.4	5.8	-7.5	26.6	29.4	30.8	1.5	1.07
충남	42.2	33.5	30.8	-8.2	-7.6	16.9	18.2	19.1	0.9	0.56
전국 89곳 평균				-7.8	-5.3	전국 89곳 평균			1.4	0.99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현황
주 : 조출생률 = 주민등록 당해년 출생자수/연앙인구*1000, 고령화비율 = 65세 이상 인구/주민등록인구

4) 지역의 쇠퇴, 유소년층과 청년층 인구의 유출

□ 교육과정에 따른 인구 유출 단계화, **대학 입학 전후 급격한 청년층 감소**

○ 유소년비율을 보면, 대체로 10% 이하를 기록, 청양·서천·부여 등은 이보다 더 심각한 상태

○ 일반적으로 출생이후 4세 이전에 한 번의 이동(부모의 이동)을 경험, 이후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정착하나 대학 입학 시점을 전후로 급격하게 감소

- 유출된 인구는 청년층 시기를 지나 장년층에 접어들어 다시 유입되는 모습

○ 최근 지역에 교육 기반을 갖추고 있는 공주에서도 청년층 유출이 심각

* 인구감소 등으로 대학정원 감축이 나타나고 지방에서 수도권 또는 수도권 인접 지역에 위치한 대학으로의 입학 가능성 증가도 요인

○ 출생과 성장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인 고용시장으로 연계되는 과정이 단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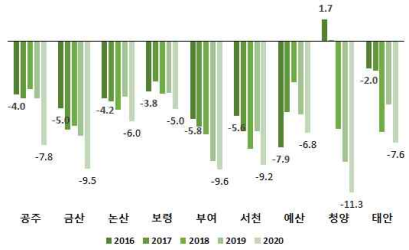
- 지역의 산업과 변화에 발맞춘 교육과 일자리의 연계가 필요

○ 청년층은 지속적인 유출이 나타나고 있는데 청양은 2016년~2017년 소폭 증가

* (청양) '16년~'17년 이후 20대 유출 심화, 청년층 유출을 가속화 / 세종시 등으로 30-40대 인구도 이동이 나타나며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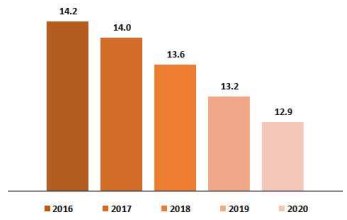
유소년비율 추이(%)

청년층 순이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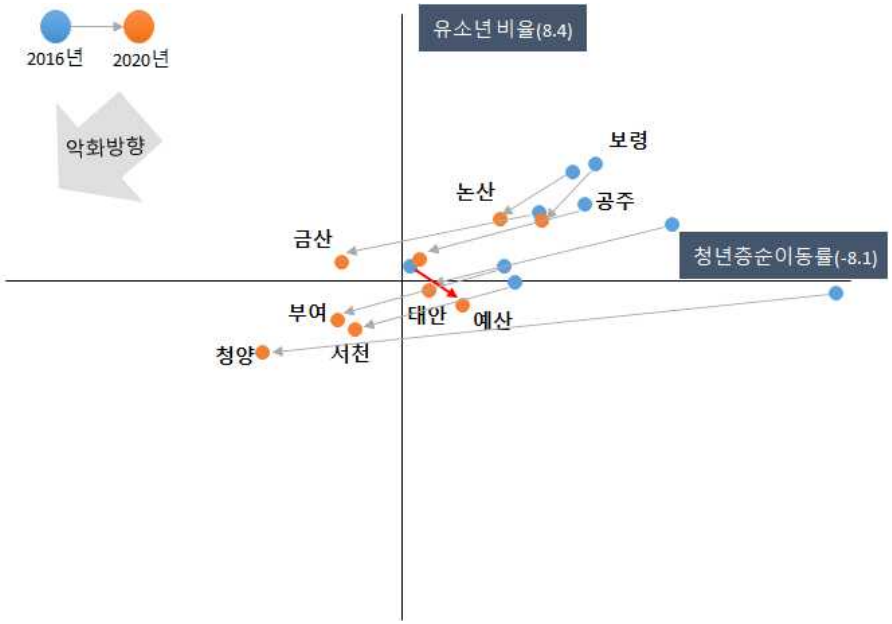


인구감소지역

충남



최근 시군별 미래 고용시장 성장 가능성(%)



주 : ()안 수치는 인구감소지역 9곳의 각 지표별 최근 연도 평균임.

구분	유소년비율(%, %p)					청년층 순이동률(%, %p)				
	2016	2019	2020	19vs20 전년차	연평균 증감	2016	2019	2020	19vs20 전년차	연평균 증감
공주	10.3	9.3	9.0	-0.3	-0.32	-4.0	-4.2	-7.8	-3.6	-0.98
금산	10.1	9.2	9.0	-0.3	-0.28	-5.0	-7.1	-9.5	-2.5	-1.13
논산	11.1	10.4	10.0	-0.3	-026	-4.2	-4.1	-6.0	-1.8	-0.43
보령	11.3	10.3	10.0	-0.3	-0.33	-3.8	-3.9	-5.0	-1.2	-0.32
부여	8.7	7.9	7.5	-0.4	-0.30	-5.8	-9.0	-9.6	-0.6	-0.95
서천	8.4	7.6	7.3	-0.3	-0.27	-5.6	-6.7	-9.2	-2.5	-0.92
예산	8.8	8.2	7.9	-0.3	-0.22	-7.9	-5.5	-6.8	-1.4	0.27
청양	8.1	6.8	6.7	-0.1	-0.35	1.7	-9.0	-11.3	-2.3	-3.25
태안	9.8	8.6	8.3	-0.4	-0.38	-2.0	-4.7	-7.6	-2.9	-1.39
충남	14.2	13.2	12.9	-0.3	-0.32	0.3	-1.0	-1.3	-0.3	-0.41
전국 89곳 평균				-0.3	-0.31	전국 89곳 평균			-1.7	-0.85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국내인구이동통계
주 : 유소년비율 = 14세 이하 주민등록인구/총인구수*100, 청년층순이동률 = 19-34세 순이동자수/19-34세 연앙인구*100

3 정책적 방향(안)[3]

□ 정부정책과 부합하는 방향에서 도내 현황에 맞는 접근이 중요

○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인구감소 지역이 주도하는 종합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충남도는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인구유인 및 정착, 경제 활성화, 연계협력 강화의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1) 인구 유인 및 정착

○ 인구감소, 고령화로 경제활력이 감소하는 지역은 결국 생활 인프라 또한 감소하게 되고 정주 여건이 악화되면서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

⇒ 지역이 가진 자원(자연경관, 접근성, 특산물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매력도를 증가시켜 관련 서비스업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기존 관광개발 정책 강화)**

* (사업예시) 캠핑, 체험, 휴양 등의 인프라 확충, 관광코스 개발(내포숲길+반려동물 동행 등 新관광활성화 전략 활용) 및 스토리텔링, 지역홍보물 제작 등 / 서해안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거점 형태의 관광지 개발, 마케팅 강화 / 은퇴자 새출발(관광업) 지원

2) 경제 활성화

○ 산업적 기반이 취약하여 새로운 산업집적이나 기업 유치가 어려운 지역, 또한, 청년층의 인구 유출로 지역 상권도 위축되는 등 경제적 침체가 우려

⇒ 농림어업의 모든 식자재 확보가 가능한 충남의 특성을 활용, 밀키트, 도시락과 같은 비대면 시대 식료품 산업육성, 충남 공동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전국적 홍보, 유통망 구축이 핵심**(6차 산업화 확대, 충남도 차원의 브랜드, 유통망 구축)**

* (사업예시)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과 연계하여 농산물 생산(1차) + 밀키트, 도시락 등의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생산(2차) + 브랜드 마케팅 및 유통망 구축(3차)

3) 연계협력 강화

○ 인접한 대전, 세종과 상대적인 정주 여건 격차는 해소가 불가능, 지속적인 인구유출은 배드타운, 인구 공동화로 이어져 결국 지역소멸 위기

⇒ 인접 도시인구 유인을 위한 행사, 축제 등을 연속적으로 기획, 청년층 인구의 참여 유도, 매월 찾아가는 장소로 공간 재창출**(인접 도시와 연계한 전략 수립)**

* (사업예시) 월별 행사를 지속 추진, 1년 행사 모두 참여시 특혜(지역상품권 등) 제공

3) 본 수시보고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안)은 각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함

<부록1> 인구감소지수 구성지표 세부설명

지표명	설 명
① 연평균인구증감률	20년 기준, 최근 5년간의 인구증감률 변화를 통해 인구감소 지속성과 최근 인구감소추세 판단, 지역의 인구활력 및 행정수요 반영
② 인구밀도	최근 5년간 행정구역 면적당 인구변화를 통해 지역의 상대적 인구 규모(밀집도) 변화 및 공간상 집적된 경제활동의 수준 반영
③ 청년순이동률	최근 5년간 청년(19세-34세, 청년기본법 제2조 제1항에 근거) 연앙인구 대비 청년 순이동자수 변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사회적 이동 추이 반영
④ 주간인구	2020년 지역의 주간인구 규모를 통해 지역의 활력(소비 및 경제활동) 반영
⑤ 고령화 비율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변화를 통해 지역의 복지수요 가중 및 생산성 저하 정도 반영
⑥ 유소년 비율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변화를 통해 향후 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지역침체도 반영
⑦ 조출생률	최근 5년간 연앙인구 대비 출생아수 변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감추이 반영
⑧ 재정자립도	최근 5년간 지자체 일반회계 규모대비 자체수입 변화를 통해 지방 재정의 여건 반영(재정부문 범용적 지표 활용)

자료 :행정안전부 2021.10.18.일 보도자료(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부록2>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구분	지역(시 · 군 · 구)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행정안전부 2021.10.18.일 보도자료(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부록 3> 인구 및 지역활력 관련 정부 주요 정책 방향

1) 인구구조 적응력 강화

○ 인구TF 4기 운영

- 생산가능인구 확대·보강 방안 : 외국인력 활용, 고령자 계속고용,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 등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협업 강화, 인구정책연구단과의 정례 분석회의 등

○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22년 4.1조원)

-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맞벌이 가정 양육환경 개선, 일·생활 균형지원 확대 등

  * 부부육아휴직활성화(육아휴직 급여 인상), 영아수당 신설('22년 30만원), 첫만남꾸러미(출생시 200만원), 공보육확충('25년 이용률 50% 목표), 다자녀지원확대(셋째자녀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임대주택 2.75만호 공급)

○ 고령자 의료·돌봄 체계 개선 및 노동시장 참여지원 확대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대상 응급안전 안심서비스확대, 국공립 요양시설 지속 확충 등
- 재가노인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판정체계」 시범 도입
- 고령자 고용지원금(54억원)」노동전환지원금(51억원) 신설, 채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정착 지원

2)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 지역소멸선제 대응

- 인구감소지역 주도「종합인구활력계획」수립
- 지방소멸대응기금('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 활용, 지역맞춤형 사업 추진

○ 초광역협력 확산 시범사업('22년 223억원)

- 초광역특별협약 : 범부처 사업을 패키지 지원, 인센티브 부여

  * (부울경) 해양쓰레기처리 수소선박

  * (대전·세종·충남) BRT자율주행모빌리티 실증 등

  * 산업단지내 대학캠퍼스 이전,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 발굴, 집중육성

- 지역스타기업, 규제특구 사업자 등 지역유망기업이 대상

  * (정부) 협업과제 기획, R&D, 정책자금 우대 및 보증료 감면 (지자체) 산단·지식산업 센터 입주, 지역투자보조금 우대, 시험장비 지원 등

○ 중소·소상공인 밀집지역 선제적·집중적 위기대응 체계('22년 33억원)

- 위기경보 단계, 모니터링 지표 등 공통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 지역특성 반영한 고유특화지표 구성 및 단계별 상시모니터링 추진

○ 농촌재생 뉴딜 : 공간정비, 일자리·경제활성화, 주거·경관개선, 사회서비스 등 연계·패키지 지원

○ 어촌소멸 방지 및 활력 증진

-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 확대(250개→300개)
- 청년어촌정착지원대상자 확대(200→220명), 귀어인의 집, 귀어학교 및 교육비 전액 지원
-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

○ 특구 중심의 지역 혁신성과 창출

- (도심융합특구) 문화·산업·주거를 종합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 검토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 가속화 및 K-선도연구소기업 추진
- (경제자유구역) 지역간 차별화, 기존 산업과 연계성 반영

3)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및 지역경제 거점 조성 확충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22년 1.2조원, 23개 사업)

  * (착공) 울산 외곽순환도로, 평택~오송 복복선화 (설계) 세종~청주 고속도로, 남부 내륙철도

○ 혁신도시 2.0(10대 브랜드사업, 771억원)

  *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혁신융합캠퍼스, 수요응답형 셔틀 등

○ 도시재생사업 성과 점검 및 확산

- 민간투자 활성화 : 기금 출·융자 및 공간지원리츠를 통해 사업성 보완, 민·관 협력형리츠를 활용한 민간참여 확대
- 대도시 적극적 정비, 중소도시 보존·개량 방식